

제4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고 총 석*

I.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의 배경과 그 진원

동구정치과정(東歐政治過程)의 변화와 그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이후 이른바 탈스탈린화 운동이 동구제국(東歐諸國)을 품미하기까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동구 여러 나라는 스탈린주의적 조직원리와 경제정책을 답습하는 즉, 모든 인간행위의 정치화와 인간적 제관계의 계획화를 추구하는 사회체제인 전체주의 체제였다. 그러나 1953년 3월 스탈린사망을 기점으로 스탈린주의의 탈신화화(脫神話化) 선봉과 더불어 동구공산주의체제에는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Tito를 정점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가 최초의 물결이었으며,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은 그 물결이 절정에 달한 것이었다. 그 뒤 이 물결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절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도도하게 지속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의 변화과정을 정치체(政治體)(polity)와 사회(society)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시각에서 포착하여 일반론의 입장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공산주의 정권은 대체로 체제의 근대화(modernization)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을 강력히 추진하여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전체주의적 동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들 정권이 이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발전목표는 경제의 근대화이며 대체로 소련의 경제발전 모형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에 준거하여 기존 산업체의 국유화(國有化), 중공업 우선정책, 농업의 집단화 새로운 동력원의 발굴, 후진적 농민층으로부터 새로운 노동력의 강제적 창출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른바 <체제형성>(system building)기의 공산주의 정권은 이러한 스탈린주의적 발전전략에 따라 근대화에 필요한 그리고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전체사회의 구석 구석에 그 힘을 뻗인다. 이를 위하여 이들 정권은 이데올로기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하고 조직적 개인적 충성심을 강요하며, 또한 강제력도 동원한다.¹⁾

그러나 이들 동원정권이 전체주의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했던 근대화의 목표에 한 걸음씩 접근하면 할수록 그간 체제 형성이라는 과업을 위하여 통제 위주의 정치과정의 역기능이 두드러진다. 이제 체제가 정치 아닌 <사회의 기능적 요구> 내지 경제요청(economic imperative)에 따라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이다.

즉 산업화 과정의 진행에 따라 경제적 복잡성과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정치체제와 사회 간의 단극적 지배관계는 오히려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피하기 어려운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이 성장하는 경제 및 사회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독점은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쉐신을 크게 해치고 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공산주의 정권은 사회의 쉐신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동원을 위하여 필요했던 독점, 통제기능 대신에 사회 내의 다양한 부문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정치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능률과 합리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눈에 띄게 도전받기 시작하는 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²⁾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이들 성숙한 공산주의체제가 추구하는 개혁조치는 다음과 같다.³⁾

- 1)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1970), p. 15ff.
- 2) Jack Bielasiak, "Lateral and Vertical Elite Differentiation in European Communist Stat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1978, p. 122.
- 3) Jran Volgyes "The Impact of Modernization on political Development", Charles Gati(ed.), *The Political of Modernization in Eastern Europ*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1) 중공업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두던 기존의 경제발전 정책을 바꿔 점차 경공업 내지 소비재생활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는 특히 일상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책이다.

(2) 국민투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3) 시장경제적 요인을 점차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 예로 차별가격, 이윤성, 다양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쟁성 등을 들 수 있다.

(4) 기획과 집행의 분권화가 강조되고 일선 지배인의 재량권의 폭이 넓어진다.

(5) 서구를 포함한 선진산업국가로부터 별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테크놀러지와 자원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6)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에 의하여 소비재의 국내유입이 증가되고 이는 국내산업체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자극한다. 국내산업체도 두드러진 국가의 간섭 없이 외국시장을 겨냥한 경쟁적인 재화생산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제분야의 변혁은 흔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동반한다. 거대한 경제관료체제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고, 생산기술과 테크놀러지에 대한 당의 간섭은 점차 줄어든다. 무엇보다 체제관리의 주역으로 테크노크라트의 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분권화가 체제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서방과의 접촉이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약간의 개인적 자유가 허용되며, 대신 정치적 테러의 양이 줄어든다. 당·국가관료체제의 엘리트를 통하여 社會 내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가 표출되며, 이를 통하여 <기능의 다원화>(pluralization of functions)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체제의 활성화와 아울러 정치 및 사회 발전의 씨앗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⁴⁾

이상의 공산주의체제(共産主義體制) 변화모형은 선진적 주요 공산주의체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에 준거해서 동구공산체제(東歐共産體制)의 변동의 성격을 설명하는데는 많은 제약점이 따른다. 특히

(New York, 1973), pp. 334-335.

4) 安秉永, 「현대공산주의 연구」, (서울:한길사, 1982), p.177.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위의 설명과정에서 변화 문제의 초점을 체제 내부에만 맞추고 있는 데 문제의 제약성이 있다. 왜냐하면 동구공산주의체제(東歐共產主義體制)의 변동 과정에서 국제환경이라는 변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소련의 비중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Kusin은 제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구(東歐)에서 공산체제변화(共產體制變化)인 개혁주의(改革主義)가 대두하게 된 주객관적(主客觀的)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⁵⁾ 먼저 객관적 요인으로 네가지를 들고 있다.

(1) 대부분의 동구 제국의 경우, 1945년-48년간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비록 그 본질이 크게 훼손되었으나)가 공존했다는 사실.

(2) 제2차 대전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동맹관계에 있었던 사실.

(3)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에 의해 주도된 탈스탈린화 운동의 충격

(4) 소비에트유형 경제체제의 실패.

Kusin은 위의 객관적 요인 이외에, 체제를 보다 인간화·능률화시켜 보려는 동구(東歐) 내외의 많은 개인과 집단 의지, 다시 말해서 체제를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욕구에 보다 대응시켜 보려는 자주적 욕구를 동구 개혁주의 대두의 주관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위의 논의(論議)에 유의하면서 동구공산주의체제(東歐共產主義體制) 변화의 배경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0년 이후 동구권에 수립된 러시아화된 마르크시즘인 범슬라비즘(pan-slavism)은 동구자체(東歐自體)의 고유한 성격과 합쳐져서 동구의 기저문화(其底文化)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련, 동구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범슬라비즘은 침략적 의도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 의미로는 슬라브왕국을 세우려는 낭만적이고 소박한 꿈으로서, 세계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신념과 자주성으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서구(西歐)의 철학적 전통과 기독교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 소비에트 마르크시즘은 동구 제국에 그대

5) Vladimir V. Kusin, "An Overview of East European Reformism", in Soviet Studies, vol. XXVIII No.3(July, 1976), pp. 340-41.

6) 오세철, "동구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책", 「공산국가에 있어서 정책 및 정책과정의 비교연구」, 제5집(서울: 연대동서문제연구원, 1982), pp. 393-94.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로 이식(移植)되지는 못했다.⁷⁾ 왜냐하면 동구 제국들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구조 속에서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전데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찌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 의회민주주의의 생생한 경험을 쌓았다. 폴란드는 근세사를 통하여 연속적인 외세의 침략으로 분할통치의 운명을 감수하여 왔으나 천주교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고도의 민족적 일체감을 다졌으며 그 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오히려 서구지향적(西歐志向的)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역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래 서구문화의 동진(東進) 통로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인종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서구문화의 수용력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슬라브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형편이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슬라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주축으로 하는 북부문화권은 일찍부터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로마캐톨릭에 귀화했고 민주주의적 사조와 분권적 정치질서에 익숙할 뿐더러 공업화의 수준 또한 높다.⁸⁾

이처럼 근세사 내지 최근세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미 형성된 비동구적(非東歐的) 체질은 동구제국이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식적 정치문화(official political culture)로서 마르크시즘-레닌이즘을 받아 들인 것일뿐, 그들의 지배적(전통적) 정치문화(Dominant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⁹⁾로서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체의 전통과 문화구조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문화체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7) 김달중 교수는 그 이유로, ① 강대국의 침략으로 점철된 동구의 특유한 메시아적 저항적 민족주의와 ② 현재국경의 인위적 설정으로 야기된 失地回復主義(Irredentism) ③ 각기 다른 공산화 과정과 이에 따른 권력 엘리트들의 상이한 성격을 들고 있다. 金達中外, 「東歐 政治·經濟·社會論」(서울:博英社, 1985), p.195.

8) 安秉永, 前掲書, pp.178-79.

9) 공산국가를 정치문화측면으로 분석시에 유용한 점으로 ① 한 나라의 정치체제의 변화와 정치변동 분석에 일관성을 제공해 주고 ② 체제의 안정도에 관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공해주며 ③ 비교공산주의를 위한 하나의 분석 테두리를 제공해 준다. 특별히 동구제국의 정치문화론적 접근시도가 유리한 점은 i) 여러가지 이질적인 전통문화를 가진 나라들이며, ii) 2차대전 이후 소련형 공산주의의 이식으로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며, iii) 정치의 구체적 태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Robert C. Tucker. "culture, political culture and 'communist society,'"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88, No.2 (june 1973), pp.181-84.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¹⁰⁾ 공산화 과정에서 동구(東歐)의 경우는 마르크시즘-레닌이즘에 입각한 스탈린체제의 소비에트형 공산주의 정치문화가 동구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특성인 국가의 우월성과 사회의 취약성(脆弱性), 그리고 메시아니즘의 도움으로 폭넓게 이입(移入)되었다. 그러나 전후(戰後)의 공산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전전(戰前)의 전통적 정치문화의 이반으로 나타난 것이 동구개혁주의(東歐改革主義)이며, 이에 는 민족주의·다원주의·종교적 특성·메시아니즘·동구 고유의 사회문화 요인 등을 지적할 수 있다.¹¹⁾

한편 이와 같은 동구 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후르시초프에 의해 주도된 탈스탈린 운동을 계기로 동구체제(東歐體制) 변화를 위한 운동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되었다. 스탈린 사후(死後) 개최한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이른바 스탈린격하운동에 앞장 섬으로써 한 세대를 획했던 스탈린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통치양식 및 사회경제적 발전유형에 결정적인 전퇴를 가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최악상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기존의 전쟁불가피론 대신에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후르시초프의 이와 같은 탈스탈린화 평화공존론 및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의 이론이 동구공산체제(東歐共產體制) 변동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 소련의 단극적(單極的) 종주권(宗主權)과 독점적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함축했던 스탈린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경제적 이탈(離脫)은 물론이지만 정치적 이탈을 더욱 수반하게 되었다.¹²⁾

다음 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실패 또한 동구체제 변화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구의 여러 나라들은 공산화 이전에 높은 경제발전 수준과 공업화를 실패했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스탈린체제가 이들 나라에 강요되어진 이래 경제는 눈에 떨 정도로 어두운 국면을 맞았다.

Szelenyi와 RoManchin 교수의 분석과 같이 소비에트유형 사회에서 경제체제의 위기는 주기적(cyclical), 포괄적 성장에서 집약적 성장으로의 전환결과(a

10) Archie Brown, political culture and change in communist states 2nd. ed. (London: The Macnillan Press, Ltd., 1979), pp.8.

11) 安秉永, “東歐의 政治文化, 政治體制, 政策過程”, 김달중외, 前揭書, p.11.

12) Zbigniew Brezinski, The soviet Blos, rev. ed. (Cambridge: Mass, 1967), pp. 158-83.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product of the transition from extensive to intensive growth) 근대화의 실패로 인한 전면적 정체현상(a failed modernization leading to total stagnation)의 입장에서 분석될 수 있다.¹³⁾ 또한 2차대전 이후 스탈린이 동구권(東歐圈)에 확대시킴 체제를 중앙집권적 경제체제(the centralistic economic system)로 볼 때¹⁴⁾ 소비를 감소시키고 강제적이긴 하나 저축증대와 산업화 등등의 중앙집권적 수단으로 투자이율을 증대시키는 발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구제국(東歐諸國)의 매우 상이한 발전과정, 조직 및 다른 성향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체제는 거시적으로 경제발전에 있어, 중앙에서 하부계층으로 권한의 분산화와 엄격한 지도체제의 완화 등을 필요로 하는 보다 유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에트체제의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컨대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이나 1980의 <폴란드 사태> 등을 볼 때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운영에서 모든 이들 나라의 경제침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동구공산주의체제(東歐共產主義體制) 변화의 진원¹⁵⁾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중적인 압력과 이에 대한 집권층의 강력한 반발 등에 의해 펼쳐지는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때 그 주역은 지식인,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며 이외에 간혹 농민이나 종교집단도 변화의 진원일 수 있다. 이들의 집단이익표출은 소극적일 수 있으나, 때에 따라 이들 집단들은 서로 제휴하여 대규모의 체제개혁운동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13) Andrew Arato, "some perspectives of Democratization in East central Europe", i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8, No.3(winter 1985), p. 326.

14) Werner Gumpel,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in the Socialistic countries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causes for changes and political Effets of Reform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German-Korean Conference on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socialist countries and Their Regional and Global significances, seoul, oct, 11-12, 1985).

15) Gordon Skilliog, "Scone and lomits of liberalization in communist East Europe" (Remark at the panel discussion devoted to the chage in communist-bloc countries at the annual mee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York, september, 1969.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다음 체제변화의 또 하나의 진원으로서 <위로부터>의 개혁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치 elite가 대체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개혁을 스스로 주도하는 경우는 사회체제의 기능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체제관리의 차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열기와 정치 elite의 개혁의지가 교합하는 경우 그 변화의 효과는 크게 상승한다. 1956년의 헝가리 의지나 1968년 프라하의 봄에서 Nagy와 Dubcek의 역할을 우리가 경시할 수 없음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분명히 구별하기는 힘든 일이며, 양자는 오히려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변화의 진원이 정치체(polity)이며 후자는 변화의 요람이 사회(society)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변동과정에서 양자의 개념은 모호해지며 변동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Korbonski는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활용하는 자유화의 개념과 skilling¹⁶⁾의 자유화 및 민주화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변화의 의미¹⁷⁾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동구공산체제 변화의 자극은 <밖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 소련에서 발원한 반스탈린운동의 물결이 동구공산주의체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동구공산체제의 변화는 「위」와 「아래」 이외에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당 및 국가관료기구 등으로 구성된 정치체(polity)와 민중적 바탕을 전제로 하는 사회(society)간의 대응 내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연속된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6) Skilling에 의하면 自由化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뜻하고 民主化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에게 있어 自由化란 쉽게 말해서 탈스탈린화와 동의어로 파악되며, 이 경우 공산주의체제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민주화는 비록 자유화로부터 비롯되고 그로부터 발전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압력에 의해 펼쳐지는 사회현상으로 파악된다.

Gordon skilling, op. cit., A. Korbonski, op. cit., p.50에서 재인용.

17) A. Korbonski, op. cit., pp.505-506.

II. 동구공산체제의 변화과정과 그 성격

동구공산체제의 변화를 어떤 차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쿠신(V. V. Kusin) 같은 학자는 동구체제의 변화를 개혁(reform)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개혁을 동구의 <스탈린적>체제가 “보다 증대된 국민적 참여보다 독립적인 이데올로기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발전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 정의하며 이 과정 속에서 기존체제는 인간화(humanizing), 민주화(democratizing) 및 자유화(liberalizing)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 Korbonski는 동구체제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으로서 동구에서 개혁의지가 극적으로 폭발되었던 제 사건을 중심으로 이른바 「자유화 paradigm」(liberalization paradigm)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유화의 개념은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포괄하는 총체적 변동을 의미하며 이 paradigm은 3개의 범주와 12개의 변수로 구성된다.¹⁹⁾

이 글에서는 동구의 체제변화를 인간화, 자유화나 민주화 개념을 내포한 포괄적인 개혁 내지 개혁주의 개념으로 본다. 풀어서 말하면 “동구제국의 공산화와 더불어 동구에 뿌리내린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질서와 관계가 보다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보다 자주적인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의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혁의지가 적극적으로 분출되었던 제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의 전개과정과 특질을 규명해보고

18) Vladimir V. Kusin, op. cit., p. 340.

19) K. Korbonsi, op. cit., pp. 231-250.

첫째의 범주인 배경조건(background conditions)은 체제의 주요변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조건을 설명하고, 두번째 범주인 역전조건(changeover condition)은 총체적 자유화의 제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측면을, 세번째 범주는 바로 자유화 단계로서의 자유화조건(liberalization conditions)이다. 그는 아울러 이들 조건의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 자유화의 기회에 논급한다.

쿨본스키는 1950년대 및 60년대에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및 폴란드의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개개의 변수를 고(high), 혼합(mixed), 저(low)로 등급화 함으로써 변동과정의 구체적 전개를 조명한 것이다.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아울러 이와 같은 개혁주의가 동구공산주의 사회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조명해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관심은 1956년의 폴란드·헝가리 사태나 1968년의 <프라하의 봄> 내지 1980-81년의 폴란드 자유노조 선포 등 격변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헝가리가 보여준 예처럼 비록 과정에 있어서는 점진적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심도 높은 변화를 이룩한 조용한 개혁주의 물결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1950년대 중반 이후 비록 단속적이거나 동구 곳곳에서 개혁주의 물결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보다 멀리 소급해 보면 1948년 유고슬라비아가 소련과의 정치적 결별을 불사하고 「사회주의에로의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1953년에 있었던 동 Berlin의 노동자봉기, 1956년의 폴란드 및 동독에서의 개혁주의와 역사적인 헝가리 의거, 1968년의 「프라하의 봄」 1968, 70, 80-81년으로 꾸준히 제기화되어 왔던 폴란드 자유화운동을 들 수 있다. 개혁주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Leonhard에 의하면 1948년 4월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정치적 결별을 <개혁 공산주의 탄생기>²⁰⁾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끝장에서 상논할 것이다. 그 후, 19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은 동구 개혁주의에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다. 곧이어 동베를린에서 노동자들의 폭동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도 터졌다. 이들 사건의 충격으로 헝가리에서는 Imre Nagy의 주도하에 <신노선>(New Course)이라 불리워지는 온건한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 제 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에 앞장을 섬으로써 스탈린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통치양식 및 소비에트적인 사회경제적인 발전모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스탈린체제의 신화가 무너짐에 따라 동구제국에서는 개혁주의의 파고가 다시 높아졌다.

Blzezinski는 크레믈린에 의해 주도된 탈스탈린운동에 대한 동구개개(東歐個個) 국가의 반응을 ①국가적·사회경제적 위기의 크기, ②노동계급과 인텔리계급의 정권으로 부터의 소외의 정도, ③개별 공산정권이 반 티토정책에 개입된

20) W. Leonhard. The three Faces of Marxis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4).

제 4 장 동구공산주의 체제의 변화와 성격

정도, ④리더십의 인기²¹⁾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헝가리의 자유화운동은 대체로 두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 1956년 10월 23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 당시만 해도 비교적 온건한 개혁노선을 취했으나, 11월 4일 소련의 두번째 군사적 개입이 시작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미 체제의 구조적 변혁을 시도하는 혁명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폴란드에서의 개혁주의의 물결 또한 한 때 숙청되었던 코몰카의 당 제1서기로의 복귀와 <10월 혁명>으로 불리워지는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하는 출발이 되었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개혁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여기서 1956년 당시 개혁주의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위 네 나라에서 제시된 주요 프로그램의 목록을 살펴보면 ①블랙내의 평등관계, 즉 소련으로부터의 자주성, ②당내 민주화(inner party democratization) 및 통제의 이완, ③선거과정의 개혁, 정치권력의 지방 분권화 등을 포함하는 정치체제의 개혁, ④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분권화, ⑤법의 회복과 정치적 희생자의 복권, ⑥문화 및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자유의 확대, ⑦마르크시즘의 인간화, ⑧평화공존 등이었다.²²⁾

위의 개혁주의운동의 특징은 첫째, 자유화운동의 주체는 대체로 노동자, 청년 및 학생을 포함하는 자식인 및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에 호응한 일부 당 간부들이었다. 스탈린주의적 분위기가 계속 잔존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위의 세 집단들간의 조직적인 의사소통은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노동자들이 선두에 나섰고 이들과 직접적인 교섭없이 지식인들도 쫓았다. 기존 이익에 대한 집착과 개혁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했던 당 간부들은 보다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위의 세 집단이 일사불란하게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²³⁾ 둘째, 이들 여러 나라의 개혁주의의 프로그램은 개혁에 의하여 새로 수립된 사회의 미래상이나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에 있어 어떤 합의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대체로 이들 프로그램은 소비에트 블록으로부터의 완전 탈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의 부정, 경제적 자본주의 및 다당제적 의회민주주의 도입과 같은 극단적인 체제변혁적 사상도 내포하지 않으며 시장사회주의의 포괄적인 경제개혁

21) Zbigniew Brzezinski, op. cit., pp. 205-206.

22) V. v. Kusin, op. cit., pp. 345-349.

23) Ibid., p. 352.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을 요구하는데 매우 주저했다. 여러나라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치관리체계의 논의가 분분했으나 이의 도입에 관해서는 얼마간의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이같은 입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단절을 의도하지 않으나 스탈린주의와 교조주의로부터 자유로이 인간주의적이며 비교조적인 지적기반으로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금세기 정치사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슬픈 기록으로 남겨진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은 196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1) 이 개혁주의운동의 원인으로서는 노보트니 정권의 당관료 독재에 의하여 초래된 만성적 경제위기와 정치적 압제, 親체코 정책에 따른 체코슬로바키아 인 및 기타 소수민족의 팽배한 불만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계획과 경영의 분석화 및 인센티브제도를 경제체제에 도입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교조적이고 스탈린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했다.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 제1공화국 이후 진보적이고 비폭력적 전통의 심화,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혐오의식의 결여, 가능한 부활여지가 있는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소련의 지원과 경제관계의 필요때문에 더욱 그러했다.²⁴⁾

1948년 공산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스탈린체제가 확립되었고 1950년대 한국전과 스탈린사망으로 탈스탈린 경향이 대두되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는 예외였다. 자주노선 추구정책이 공산국가의 단결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더우기 1957년 1월 29일자 당기관지 루데 프라보(Rudepravo)는 “반스탈린운동은 반동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악화시키며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1967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는 동독과 더불어 소련의 정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였다.²⁵⁾

24) Brzezinski, op. cit., pp.46-47.

25) Szulc, Czechoslovakia since world war U(N.Y.; Viking press, 1971), p. 155; 정진위,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 「공산국가에 있어서 정책 및 정책과정의 비교연구」 제3집(서울:연대 동서문제연구원, 1980), p.7에서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그런데 1949년 이래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총칭 COMECON) 하에서 점차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가 소련의 수탈적 통제와 기술, 원자재, 자본의 한계로 경제의 악화일로 상태에 접어들게 되자 경제회복을 위한 신경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65년 1월 「계획경제,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어 경제부진에 활력을 넣으려 했다. 이 경제정책은 개인의 자주성과 창의력을 존중하였고 서방의 이윤도입방식을 채택하였다.²⁶⁾ 1967년 신경제계획의 실시로 새로운 경제학자와 각료가 세력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개혁요구도 증대되어 동년 6월 제4차 체코슬로바키아 작가동맹대회(作家同盟大會)는 지식인(知識人)의 자유화운동을, 공개적 투쟁으로 격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0월 두브체크는 경제부흥을 위해 시장경제제도(市場經濟制度)의 도입을 주장하고 서방과의 교류확대 등 새로운 사회주의상을 제시하였다. 결국 1968년 1월 두브체크의 제1서기 승제와 3월 개혁주의자 Ludvik svoboda가 취임하고 한달후 Oldrick Cernik 내각이 발족하여 개혁주의자들도 진용(陣容)을 갖추게 되었으며 9월 체코슬로바키아개혁에 관한 행동강령으로 민족적 공산주의의 성격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하고 ‘창조적’ 마르크시즘의 사고방식 적용²⁷⁾을 발표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개혁주의는 독자적 정책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자유화운동은 체제내의 범국민적 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으나, 외부의 결정적 요인, 즉 소련의 무력

재인용.

Gordon Skilling, *Czechoslovakia's Interrupted Revolu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83.

1956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外交政策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社會主義 진영을 헤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창조적’ 외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외교정책은 나타나지 않았다.

26) Robert H. Donddson & Joseph L. Nogee, *Soviet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22*(N.Y: Pergamon Press, 1981, p. 223.

개혁주의자들은 당의 중앙기관, 간부회의, 중앙위원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의 필요성 때문에 1967년 4월 보수파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간부회의 구성이 11명 위원중 개혁파 5명, 보수파 3명, 중도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7) Gordon skilling. op. cit., p.219에서 재인용.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개입으로 그 개시 직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체제는 다시 권위주의적 질서로 반전(反轉)의 길을 걷는다.

(2) 1968년의 프라하의 봄은 스탈린체제로부터의 민주화와 경제정책의 개혁, 그리고 사회·문화차원에서의 자유화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①공산당의 일인독재를 지양하며 당원의 특권을 배제하고 ②언론 비판, 집회, 여행 등 국민의 모든 생활에 자유를 보장하며, ③복수후보를 내세워 비밀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선거방식을 채택하고, ④기업의 자주성 확립, 노동자의 데모·스트라이크를 인정하며, ⑤스탈린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노보트니치하에서 숙청된 자들을 복귀시키며, ⑥대외적으로 독자노선을 추구하여 대서방접근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적 개혁의지를 집약한 1968년 4월 체코공산당의 행동강령과 Ludvik Vaculik가 기초한 <천어 선언>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²⁸⁾

① 근본목표는,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동태적 발전을 가능케 하고, 폭 넓은 민주주의와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위주의 관리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전체 정치체제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② 공산당의 민주화가 급선무이며 당은 더 이상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마련된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당의 지도적 역할은 인정하나 독재자로 군림해서는 안된다.

③ 의회제적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결합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민전선의 범주내에서 활동하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④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구성되는 연방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수 민족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⑤ 시민의 자유권, 사법권의 독립, 정치적 희생자의 복권, 언론·결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기업 및 각종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치관리(Self-management)가 보장되어야 한다.

28) Philip Windsor and Adam Roberts, Czechoslovakia 1968: Reform, Repression and Resistan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p.147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⑦ 국가의 간섭과 거시적 경제계획을 유보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사회주의 형태로 체제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⑧ 문화의 자유 및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학문 연구의 자유가 요구된다.

⑨ 소련 및 동구 블록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보다 활발한 외교정책을 펼친다. 주권과 동등권의 보장, 특수 상황에 대한 존중, 폭 넓은 국제적 접촉과 공개적 의견교환 등을 외교의 기초로 한다.

⑩ 마르크시즘을 <개혁철학>으로 이해한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특히 마르크시즘의 인간적 측면을 보다 풍요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마르크시즘의 독단적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이상으로 집약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프로그램은 1956년 폴란드 및 헝가리 개혁안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프라하의 봄>의 예는 그 이전의 개혁등에 비하여 보다 숙고된 사고체제를 반영할 뿐 아니라 정치프로그램과 경제프로그램을 체제있게 연결시킨 종합적 정책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부각된다.

(3) 위의 자유화운동은 이미 1960년대 초 두개의 지성집단(知性集團)에 의해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문인(文人)과 예술가로 구성되는 창작인과 경제·공업·사기업·철학 등 제반분야와 연관되는 학계와 실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지성집단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준비되었다.²⁹⁾ 이들 집단에 의해 '아래로부터' 주도된 개혁의지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당내의 진취적 간부들의 의식속에 점화되어 '위로부터'의 자유화 의지를 유발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라하의 봄의 주요 특징은 진취적 당관료까지를 포함하는 변동추구의 지적 엘리트에 의하여 주도되고 기존체제에 염증을 느낀 민중에 의하여 뒷받침된 전국민적 개혁운동으로서 인간적 면모를 갖춘 사회주의(Socialismus mit menschlichen antlitz)로 나타났다. 여기서 민중은 변동 역군인 엘리트의 정치적 배후 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동의 진폭과 속도에 영향을 가하는 압력의 원이기도 했다. 엘리트와 대중간의 정치적 회합이 이처럼 조화롭게 또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예는 역사상 그리 흔하지 않다.³⁰⁾ 그러나 과격한 정치변혁보다

29) 安秉永, 현대공산주의연구, pp.185-186.

30) 上揭書, p.186.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사회주의의 일반적 틀속에서 점진적 체제전환을 통한 목표달성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자본주의로의 복귀나 뉴레프트적 의미의 반관료혁명(反官僚革命)의 성격을 뜻하지는 않았다. 더우기 이같은 사실은 <프라하의 봄>의 주도적 인물인 두브체크가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여 동구제국과의 결속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명백해진다.

(4) 1980년 초에 일어난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自由勞組運動)은 소련의 반대와 폴란드 군부의 개입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내부적 발전방향을 나타내준 운동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운동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이 운동³¹⁾은 그것이 집권당인 통일노동당과는 별개의 기반에서 폴란드의 기존 사회주의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폴란드를 포함한 동구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개혁운동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956년 헝가리 저항운동은 당시 헝가리 공산당 정치국원겸 수상이었던 Imre Nagy이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개혁운동이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은 체코공산당 제1서기 Dubcek가 주도한 것이었다. 1956년 폴란드 노동자들의 자유화운동도 폴란드 통일노동당 제1서기 Gomulka의 지지를 받았고 그의 개혁의지는 이들의 요구에 상응한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1982년 초반을 넘는 지점까지 그 열도를 더했던 폴란드 자유노동운동은 역사에는 골짜기가 없다는 말처럼 1980년 초에 와서 갑자기 분출된 것이 아니다. 이미 지적인 1956년의 저항운동이 있었고 그 후에도 1970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정부의 유희가격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이 세 경우 모두 노동자들의 요구가 폴란드 정부의 시책에 상당히 반영되었으나 1956년의 헝가리나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와는 달리 1956년 폴란드는 소련의 무력개입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개혁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었고, 1970년과 1976년의 폴란드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희가 인상 반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라서 1980년초 이 나라 자유노조운동도 이와 같은 폴란드 노동

31) 李正馥, “폴란드 反體制 운동연구”, 「사회학과 정책연구」 제4권 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59-69, 1982.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 pp.249-262에서 많은 내용을 참고했음.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자들의 이익표출운동이 축적, 발전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폴란드의 노동자들은 1980년의 자유노조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통일노동당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세력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정변이 모두 노동자의 파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명백해 질 것이다. 1956년 Poznan의 노동자 파업은 스탈린주의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적 공산주의자” 고물카가 통일노동당 제1서기로 복귀하여 개혁정책을 펴도록 도왔고, 1970년말 Gdanisk 레닌조선소 노동자들의 식료품인상반대 파업은 고물카를 실각시키고 Edward Gierek 정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폴란드 노동자들은 다시 정부의 식료품가격 인상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이 산발적인 파업이 기에레크를 실각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24시간 이내에 그 인상결정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기에레크는 1970년 말과 1976년 두 경우 모두 여러 번에 걸쳐 그 자신이 당의 정치국원들과 정부의 각료들을 데리고 직접 노동자들과 협상(協商)을 하였고, 이 중에는 장장 9시간이나 계속하여 파업중인 노동자들과 만난 경우도 있었다.³²⁾ 1980년 7월 1일 폴란드 정부가 육류가격의 인상을 결정하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폴란드 곳곳에서 일어났다. 먼저 바르샤바(Warsaw) 근교의 Ursus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파업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육류 가격인상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그들의 파업은 평화리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각 공장에 파업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위원회들 사이에는 아무런 횡적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레벨에서 자기 그 지방 행정책임자와 협상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8월 중순 발틱해안의 그다니스크에 소재한 레닌조선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파업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고 그 파업은 종래와는 좀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의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하면서 타지역의 파업위원회와 협력하여 8월 16일에는 공장상호파업위원회(Interfactory strike committee, MKS)를 결성하였고 8월 18일에는 그다니스크 지방의 지사와 바비우후(Edward Babiuch)

32) 이 對話의 발췌문은 New Left Review, 72, March-April, 1972에 실려 있다.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변화와 성격

수상에게 자유노조 결성권을 포함한 21개항의 요구조항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³³⁾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다니스크 MKS가 정부에 요구한 제1항목은 “당과 고용주로부터 독립한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승인”이었고, 제2항목은 “파업권의 보장과 파업참가자 및 지원자의 안전보장”이었다. 그 다음 세 항목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으로, 제3항목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4항목은 정치범의 석방을, 제5항목은 매스미디어의 MKS 활동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제6항목에서 마지막 제21항목까지는 경제 및 사회복지면의 요구로 경제정보의 공개 및 제사회집단의 개혁계획토의 참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불, 기본임금의 인상, 식량공급의 보장, 「상업점」의 폐쇄 및 「국내수출점」에서의 상품판매금지, 당기관·경찰·국가안보경찰의 경제적 특권폐지, 식량의 잠정적 쿠폰배급제 실시, 노령연금 수급가격의 완화, 노동자에 대한 의로서비스 개선, 보육원과 유치원의 증설, 3년간의 유급 육아휴가제 도입, 주택할당, 대기기간 단축, 출장수당인상, 토요일 휴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⁴⁾

1970년과 1976년의 노동자 파업 때에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요구를 앞세운 부차적 요구사항이었다. 정부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은 뒤에 파업을 곧 중지하였던 사실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³⁵⁾ 그러나, 상기 요구조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의 노동자 파업은 여전히 경제적 이유에 그 발단을 두고 있으나 그들은 경제적 요구에 앞서 자유노조의 결성권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드디어 <뜨거운 8월>의 마지막 날인 1981년 8월 31일, 정부와 노동자대표간에 자유노조의 결성에 관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므로써 폴란드는 새로운 역사의 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해 9월 22일 폴란드전역에 35개의 독립노조대표 100여명이 노조연맹을 구성하고 이를 <솔리다르노스크>(連帶)라 명명하므로써 폴란드 자유노조의 조직이 제도화되었다. 해를 넘기면서 자유노조의

33) Jan B. de Weydenthal. “Workers and party in poland.” Problems of communism, (November-December 1980), pp.2-10참조.

34) Ibid., pp.9-10.

35) 1970년과 1976년 폴란드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는 peter Green, “The third round in Poland”, New Left Review. 101-102, February April, 1977, pp.69-108참조.

제 4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조직확대는 급피치를 올리며 비단 육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과 대학생, 교수, 의사, 기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을 망라하여 대규모의 조직을 확보하게 되어 그 조합원의 수가 무려 9백 50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힘이 비등해 지자 자유노조는 사회의 각 영역에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동안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공산당의 정치적 의지와 필연적인 갈등을 보이게 되었다. 체제존립이 위협받는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한 폴란드 정권은 소련의 엄호아래 <아래로부터> 자유화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체제본위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사독재를 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16개월 동안이나 체제개혁을 위해 자유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은 좌초될 수 밖에 없었다.

2)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1년 9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제1회기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제2회기로 나누어 개최된 연대전국대회(連帶全國大會)에서 나온 솔리다르노스크의 강령을 보면 알 수 있다. 「連帶」전국대회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제1회기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제2회기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9월 상순의 대회 제1회기에서는 동구제국에 자유노조결성운동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회의 자유선거를 요구하였다.³⁶⁾ 이는 「連帶」가 단순히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 통일노동당의 독재적 지배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의도는 제2회기의 결의 내용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제2회기에 대회는 금후의 「連帶」의 운동방향을 나타내는 8장 37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³⁷⁾ 동 강령은 「連帶」의 투쟁목표가 좀더 나은 생활조건의 획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 권력남용(權力濫用)의 방지, 인간의 존엄, 신념의 자유를 성취하는데 있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저항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민 폴란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連帶」가 의거하는 가치는 그리스도교의 윤리, 민족적 전통, 세계노동자의 민주적 전통이라고 하였는데, 실로 이러한 가치는 마스·레닌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신봉하는 폴란드 통일노동당의 노선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또 동 강령은 국내외 정세에 관한 「連帶」

36) 「朝日新聞」, 1981年 9月 26日 朝刊.

37) 「朝日新聞」, 1981年, 10月 8日 夕刊 2面.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중앙의 정당과 국가기관에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통치제도가 폴란드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連帶」는 현재 폴란드의 대외관계에 대하여는 「連帶」가 동맹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제정치구조의 변혁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처방하고 있다.

「連帶」의 강령은 이 밖에도 「連帶」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기업에서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와 민주적 개혁을 추구한다.
- ② 위기타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만 시장균형의 회복을 인정한다.
- ③ 위기타개와 경제개혁은 사회의 관리하에 실행되어야만 한다.
- ④ 법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대표가 되어야만 한다.
- 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다원주의가 폴란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어야만 한다.
- ⑥ 자주관리와 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경제를 담당하는 의회 제2원의 설립을 촉구한다.
- ⑦ 국제통화기금(IMF) 가맹을 검토하고,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
- ⑧ 기본적 인권옹호(人權擁護)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촉구한다.

이상의 「連帶」 강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連帶」는 우선 제1단계로 기업과 지방의회의 레벨에서 자치관리제도의 수립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다음 단계인 중앙 레벨에서의 의회정치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이기도 하였다. 「連帶」의 고문, 부로니스와푸 게레메구교수는 「連帶」강령 채택 이후 일본 조일신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제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2년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 「連帶」가 중앙권력의 체제변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논평함으로써, 다원주의에 입각한 의회제도의 확립이 「連帶」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連帶」의 강령은 이익단체로서의 노조강령이기 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강령과 방불한 것이었다.³⁸⁾

3) 이번 폴란드 체제개혁운동은 동구의 자유화운동 사상 가장 의미있는 주

38) 「朝日新聞」, 1981年, 10月 12日 朝刊 6面.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목의 대상이 되었다. 동구개혁주의는 50, 60, 70년대의 노동자들의 이익표출 운동을 중심으로 할 때, 그 특징은 과격한 체제변혁을 피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틀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구호는 두개의 극단적인 축, 즉 <자유주의>로의 회기나 혹은 New Left적 의미의 「반관료적 혁명」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는 추세이다. 다시 말하면 한 체제 내에서 하위체제를 변경시키는데 그 목적(aim to amend a subsystem within a system)³⁹⁾이 있었던 개혁주의운동이다.

이에 반해서 1980-81년의 폴란드 자유화운동은 집권당인 통일노동당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폴란드의 정치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과격한 개혁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유화운동은 기존의 동구개혁주의 운동(東歐改革主義運動)의 틀을 뛰어 넘는 심층적인 변화추구의 노력으로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유화 목록을 보다 대담하게, 또 구체적으로 확대시켰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자유노조의 결성권, 당에 대한 명명제도의 거부와 모든 사회·경제 조직에 있어 자치관리의 실현, 사회 및 국가평의회 자유선거 등이 있으며 그 중 앞의 두 가지는 1981년의 제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실제로 거의 완벽하게 쟁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공산주의체제내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사체(結社體)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정치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사실이나 모든 사회·경제조직이 당의 간섭없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하나의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당의 절대적인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공동화(空洞化)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은 더 이상 관제노조라는 수족을 거느릴 수 없게 되었으니 인사권(人事權)을 통한 사회경제조직의 지배도 그 마지막 장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³⁷⁾

이와 같은 모든 체제변화는 한마디로 결론지어 요약하면 공산주의 본질의 훼손을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레닌주의적인 통치원리근간인 당독재체제의 와

39) V. V. Kusin, op. cit., p.338.

40) Marion Mushkat, "The Evolution of the Situation in Poland in 1980." Berichte des Bundes-Institutes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p.15.

제 4 장 동구공산주의체계의 변화와 성격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독재의 와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다원주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단극적(單極的)인 하나의 큰 바위덩어리(monolith)로 표상되던 체제가 상호교섭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내의 관계로 점차 바뀌어 가는 과정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서 이해 관계자들이 당의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레닌주의의 당독재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바탕의 하나인 전도대이론(傳導帶理論)의 퇴색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자율경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는 정부, 경제 및 사회분야의 주요 직책에 대한 중앙당지도층의 동의권을 의미하는 이른바 명명제도(Nomenklatura System)의 부분적 와해를 의미한다. 당은 이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지킬 수 있는 주요한 보루를 잃게 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당의 권위가 크게 상실되는 상황에서 자유선거의 실시는 사실상 공산당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독의 주간지 「Spiegel」이 발표한 비밀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폴란드 통일노동당(共産黨)은 전국민의 3%의 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반해, 이미 실존치 않은 기민당(基民黨)은 43%, 사회당(社會黨)은 20%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리라 전망했다.